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장관 모두말씀

반갑습니다. 장관 김영훈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본부의 실·국장들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생중계를 통해 국민께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올해를 임할 것인지,
국민께 직접 보고드리고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우리는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께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은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 국정성과는 현장에서 국민들이
평가한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산하 공공기관,
13일 경사노위, 중노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 집행의 최일선 사령관인 여러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 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의 지방관서장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 추구권을, 제32조에서는
일할 권리를, 제33조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가치를 국민이 먹고사는 현장에서,
매일의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우리 노동부의 존재이유입니다.

정책은 본부에서 만들지만,
그 성패는 오직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국민들은 우리 지역 지청장의 판단과 지휘,
근로감독관의 발 빠른 조치,
고용센터 상담사의 따뜻한 상담에서
우리 정부의 유능함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곧 저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실천이 곧 우리 정부의 행동입니다.

각 지방관서는 본부 지침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내 관할 구역에 억울한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는
산업재해, 임금체불, 청년의 일할 기회라는
노동시장의 3대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과거처럼
그물을 넓게 던지는 식의 관행적 행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핀셋 행정'을 주문합니다.

먼저, 산재 예방입니다.

청장님들은 관내의 산재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언제 사고가 집중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집중되는지,
추락, 끼임 등 어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 등
패턴을 찾아내 취약요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과 유관기관, 공단, 지역사회 등 협조를 통해
이렇게 특정된 위험·취약요인을 골라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둘째, 임금체불입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절도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도둑맞아 고통받지 않도록
관내 어느 지역, 어느 업종, 어느 시기에
임금체불이 빈발하는지 분석하십시오.

월급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 취약한 고리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먼저 찾아가 확인하고, 지도하십시오.

셋째, 청년 일자리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왜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직 의욕이 없는지, 직무역량 향상이 필요한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등 각 청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요구하는 지역 맞춤형 타겟 목표입니다.

보여주기식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전국의 지방관서장 여러분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속도’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정된 정책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정책은 죽은 정책입니다.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일해야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진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소통’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실력이자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오늘 이 회의처럼 여러분의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한발 먼저 다가가,
국민들이 “내 말이 정부에 닿고 있구나”라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소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뀌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유능함’으로 답해야 합니다.
‘일 잘하는 정부’, ‘내 삶을 실제로 바꿔주는 정부’임을
성과로 입증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직접 발로 뛰어주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만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